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의 특징과 과제

이 해 정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은 정치·경제논리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상호 신뢰 분위기 조성, 사회 통합 등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1985년 시작된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사업은 정치적 상황에 크게 좌우되었으며, 남북간 회담과 방문 인원도 체육이나 종교 부문 위주로 진행되었다는 한계와 특징이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최근 5년간은 급감하였으며,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중단 상태에 있다. 이로 인해 2012년 상호 방문 인원과 남북협력기금 지원액은 2007년 대비 각각 1.1%, 33.9% 수준에 불과하였다.

동서독의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접근을 통한 변화'를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서독 정부는 청소년들의 동독 견학 여행과 예술인 교류 지원 사업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둘째, 교류의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동서독은 1970년 우편협정을 시작으로 1986년 문화협정 등 각종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가 대폭 확대되었다. 셋째, 도시간 자매결연은 통일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였다. 73건의 자매결연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는 통일 후 행정통합과 주민통합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국경지대의 재난 대비 정보 교환과 수자원 공동관리, 에너지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중국-대만의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민간 창구를 통한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와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를 통한 양안간 문화·학술 교류가 활성화되었다. 둘째, 민감한 사건 발생시에도 양국의 유연한 대응으로 교류를 지속하였다. 1994년 천도호사건, 1995년과 1996년 1·2차 대만해협 미사일 위기와 2003년 중국의 대만해협 미사일 배치 강화 등 정치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민간 교류는 중단없이 지속하였다. 셋째, 협의의 정례화·제도화를 추진하였다. 2006년 양안경제무역문화포럼을 시작하여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이 참가하는 포럼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협의를 구체적으로 추진하였다.

남북 상호 신뢰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정치·이념적 갈등 가능성이 낮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용이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민족 동질성 회복 사업 복원이 시급하다. 거례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 등 민족 언어를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역사 공동 복원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 일제강점기 공동연구, 개성 만월대·고구려 고분 남북공동 발굴조사 등 기존 추진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 셋째, 민족 화합 과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각종 국제체육대회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을 통해 민족 화합을 과시해야 한다. 넷째, 한반도 환경 보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나무심기사업 등 기존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제약공장 및 병원 설립 등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정부 차원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청소년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청소년 관광, 역사문화 분야 등을 중심으로 미래 통일 세대 교류를 확대하여 남북간 이질감 해소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협력사업의 독자성 확대를 위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남북간 사회문화협력 개관

남북 사회문화협력은 정치 논리나 경제 논리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평화적 남북관계 형성과 남북한 사회통합의 기초를 제공한다. 남북 사회문화협력사업이란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북한이나 제3국에서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계약에 따라 계획·준비·실시 및 사후처리 등이 연속성 있게 이루어지는 행위²⁷⁾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사회문화협력사업을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 종교, 언론출판, 과학기술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남북 사회문화협력은 민족 동질성 회복,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 등의 의미를 지닌다. 민족 동질성 회복 측면에서 사회문화협력은 분단으로 인한 이질화를 극복하고, 상호 이해증진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동질성을 회복하여 사회 통합의 기초를 제공한다.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 측면에서 남북간 사회문화협력 확대는 국제사회에서 한민족의 역량을 과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된다.²⁸⁾

남북간 사회문화협력 사업의 특징과 성과

정치적 상황에 크게 좌우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2000년대 들어 사회문화협력이 본격화되었으나, 남북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극히 일부 사업만 유지되었다. 2000년

27)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2012.7.26, 개정)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한·북한 또는 제3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획·실시 및 사후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조사·연구·저작·편찬 및 그 보급에 관한 사항
2. 음악·무용·연극·영화·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동제작·공연 및 상영에 관한 사항
3. 음반·영상물 및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체육행사 단일팀 출전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
5. 문화·학술 연구단체 및 청소년 단체의 육성과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8) 2012년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4.3%가 남북한 사회문화교류가 남북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 등 대규모 체육행사와 6.15 남북공동행사, 8.15 공동행사 등의 기념일 공동행사 등이 이루어졌다.²⁹⁾ 2007년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는 남과 북이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2008년 이후 신규사업은 추진되지 못했으며, 개성 만월대 공동조사업,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신계사 복원 기념 남북 공동 법회 등 극히 일부 사업만 유지되었다.

체육회담 위주의 회담 진행

1979년 2월 남북탁구협회 회의를 시작으로, 총 54건의 사회문화협력 회담 가운데 46건이 체육분야 관련 회담을 차지할 정도로 체육회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08년 2월 베이징올림픽 공동응원단 경의선 열차 이용 관련 제2차 실무접촉을 끝으로 중단되었다. 총 54건의 회담 가운데 교육학술 분야 4건, 한반도 환경 보전 관련 4건을 제외한 46건이 체육분야 관련 회담이다. 교육학술 분야에서는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1~4차 실무접촉(2005. 9~2007. 4) 등 역사 공동 복원 사업이 추진되었다. 한반도 환경 보전 관련해서는 북한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남북실무접촉(2005. 4), 북한구제역 방역지원을 위한 남북실무접촉(2007. 3), 북한 산림병충해방제 지원을 위한 남북실무접촉(2007. 5),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2007. 12) 등이 추진되었다.

〈남북간 사회문화협력 관련 회담 추이〉

(단위 : 건)

연 도	79	84	85	86	87	89	90	91	02	03	04	05	06	07	08	합계
건 수	4	3	1	2	1	9	7	7	2	1	1	6	3	6	1	54

자료 :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사이트(<http://dialogue.unikorea.go.kr>) 참고.

종교 분야의 방문 건수 및 인원 최다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지침」이 제정된 이후 2012년 말까지 사회문

29) 박영정 외,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pp. 17~36.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의 특징과 과제

화분야의 남북간 방문 건수는 총 1,664건으로 25,615명이 상호 왕래하였는데, 이 가운데 종교 분야가 461건, 9,201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방문건수 대비 비중은 종교(27.7%), 체육(20.5%), 교육학술(19.1%), 언론출판(18.4%), 문화예술(9.9%), 과학기술(4.4%) 등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북 → 남으로 방문은 체육분야가 전체의 73.5%를 차지하였다.

〈남북간 사회문화협력관련 방문 현황(1989년~2012년)〉

(단위 : 건, 명)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	종교	언론출판	과학기술	계
남→북	307 (3,697)	157 (2,446)	317 (4,114)	458 (9,142)	303 (2,949)	73 (400)	1,615 (22,748)
북→남	11 (101)	8 (540)	24 (2,107)	3 (59)	3 (60)	0 (0)	49 (2,867)
합계	318 (3,798)	165 (2,986)	341 (6,221)	461 (9,201)	306 (3,009)	73 (400)	1,664 (25,615)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각호 참고.

참여정부 시기 사업 승인 집중

1991년부터 2012년 말까지 통일부 승인 사업 156개 가운데 참여정부 시기 승인 사업이 120건으로 이 시기에 사업 승인이 집중되어 있다. 1990년 9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1991년부터 2012년 말까지 통일부가 승인한 사회문화교류협력 사업은 총 156개이다.³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까지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은 3건에 불과하다. 국민의 정부 5년간 28건으로 확대되었으며, 참여정부 시기 120건으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 급감하여 지난 5년간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은 5건에 그쳤다.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현황〉

(단위 : 건)

연 도	91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10	11	합계
건 수	2	1	5	5	5	6	7	13	16	47	26	18	3	1	1	156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각호 참고.

30)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각호 참고.

실적 종합

19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의 서울-평양 동시 교환 공연으로 시작된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은 민족 동질성 회복 사업 다수 추진과 분야별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다. 우선 민족 동질성 회복 사업이 다수 추진되었다. 일제강점기 공동연구, 개성 만월대·고구려 고분 남북공동 발굴조사,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 등 역사와 민족 언어를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이 지속되었다. 분야간 시너지 효과도 창출되었다. 체육 협력이 문화예술 협력으로 확대되는 등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다.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행사로 남북청년공동문화행사 개최, 2003년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 행사로 남북통일음악회 개최 등이 좋은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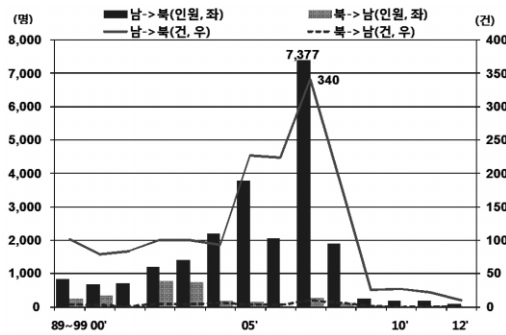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의 분야별 성과와 한계(종합표)〉

분 야	특 징	성 과	한 계
종교	- 2008년 이후에도 중단없이 접촉을 지속한 유일한 분야	- 교류의 지속성, 종교 건물의 복원 및 개축은 문화재 보존에 기여	- 교류의 비대칭성, 단순 지원 및 수준의 교류
체육	- 남북간 상호왕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짐 - 사회문화협력 가운데 북한에서 남한으로 방문 건수와 인원이 가장 많은 분야	- 국제대회 공동입장으로 한민족 과시, 대규모 상호 왕래 추진	- 교류의 정례화 미흡
교육학술	- 역사 분야 등 상대적으로 이념 충돌이 작은 범위부터 협력 추진	- 역사 유적 발굴 UNESCO 등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	- 교육 분야의 협력은 단순 지원 수준
언론출판	- 남북간 공동 작업 진행 등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교류 추진	- 북한 주민 참여 유도, 민족 언어와 문학의 공감대 형성	- 저작권 교류 관련 제도적 장치 미비
문화예술	- 남북 사회문화협력 가운데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음	- 남북공동행사의 지속적 개최	- 공연교류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침, 영화교류도 초보적 수준
과학기술	- 북한의 우수한 인력이라는 인적 인프라 구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제도적 한계 내재	- IT 분야의 성공적 협력, 인력 양성 효과	- 전략물자수출통제 등 제도적 제약
지방자치단체	-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농업 분야 협력 사업으로 발전, 사회문화교류는 상대적으로 부진	- 관계 연속성 확보 및 사업 시너지 확대 모범 사례 구축, 남북 공동대처를 통한 상생 방안 모색	- 지역간·주민간 실질적 교류 미흡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의 특징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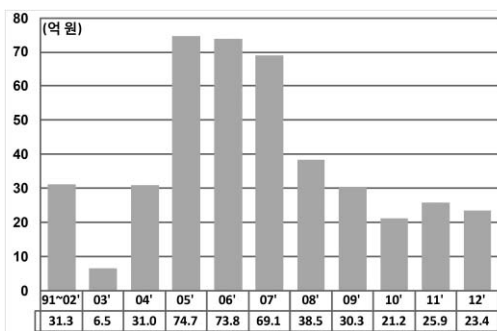
특히, 최근 5년간의 사회문화협력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남북관계가 악화된 이후 사회문화협력은 급감했으며, 극히 일부 사업을 제외한 협력은 대부분 중단된 상황이다.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은 2007년 남북간 교류 건수 340건, 교류인원 7,639명을 기록했으나, 2008년 이후 급감하여, 2012년에는 남북간 교류 건수 10건, 방문인원 81명(2007년 대비 1.1% 수준)에 그쳤다. 2008년 이후 남북협력기금의 사회문화협력 지원³¹⁾도 급감하여 2012년에는 23.4억 원이 집행(2007년 69.1억 원 대비 1/3 수준에 불과)되었다. 2009년 이후에는 거래할 큰사전 편찬 사업과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사업 등 2건에 대한 지원만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남북간 사회문화협력관련 방문〉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동향』, 각호.

〈남북협력기금 사회문화협력 지원〉



자료 : 국가통계포털.

분단국 사회문화협력 사례 연구 : 동서독과 중국-대만의 경우

동서독 사회문화협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된 독일은 1961년 베를린 장벽 설치로 동서독간 문화 교류가 거의 단절되었다가 1975년 이후 주로 동독 문화예술인이 서독에서 연주회나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점차적으로 교류가 확대되었다. 동서독간 사회문화협력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1990년 8월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1991년 3월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부터 2012년 말까지 총 10조 4,121억 원 집행, 이 가운데 사회문화협력 지원은 0.41%에 해당하는 425.7억 원이 집행

서독 정부는 ‘접근을 통한 변화’를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서독은 동독정권의 부정적·소극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서독은 경제적 실익보다는 긴장 완화와 동질성 유지에 주력하였다. 또한, 서독 정부는 재정적, 정책적으로 민간의 역할을 지원하였다. 서독은 민족 동질감 인식을 위한 청소년 교류와 동서독간 예술인 교류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서독 교회를 통해 동독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였다. 청소년 교류 부문에서 서독의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대동독 견학여행을 장려하고, 청소년여행에 대한 교통비 및 체류비를 지원하였다. 예술인 교류 부문에서 서독은 동독예술인이 서독을 방문하면 일비를 지불하였으며, 교류협력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각각 50%씩 부담하였다. 인도적 지원 부문에서는 프라이카우프를 통해 서독 교회가 동독에 현금과 현물을 지불하고, 정치범과 이산가족을 서독으로 송환하였다.

동서독은 교류의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동서독은 1970년 우편협정, 1971년 베를린협정, 1972년 통행협정, 1972년 기본조약, 1974년 체육·보건협정, 1986년 문화협정, 1987년 방송협정 및 과학·기술협정 등 사회문화 교류 관련 각종 협정을 체결하였다. 1986년 5월 동서독 문화협정 체결시 문화의 개념을 연극·문학·음악·미술 분야를 포함한 교육, 학문, 출판, 도서관, 역사적인 문서, 대중 매체, 스포츠, 청소년 분야까지 확대하였다.³²⁾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 매년 600여 건의 사회문화교류가 이루어졌으나, 1986년 문화협정 체결 이후 6개월간(1988. 10~1989. 3) 563건의 사회문화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³³⁾

지자체간 상호 협력은 통일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였다. 1986년 4월 동서독간 자매결연 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1989년 동독 붕괴시까지 동서독 도시간 자매결연은 총 73건이 성사되었다. 이러한 도시간 자매결연은 통일 과정에서 경제지원, 인력지원, 행정지원 등으로 이어져 통일 후 행정통합과 주민통합의 중요한 촉매제

32) 기본조약의 후속협상으로 1973년 11월에 개시된 문화협상은 13년이 지난 1986년 5월에야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음. 이는 동독이 서독문화의 침투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임. 이우영 외, 『남북한 평화 공존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원, 2001. p. 17 참고.

33) 박영정 외,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p. 119.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재난에 대비한 상호 협력이 추진되었는데, 1973년 9월 동서독은 국경지역에서의 홍수, 화재, 산사태, 전염병, 병충해발생, 환경오염 등에 대해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하고, 수자원을 공동관리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접경지역 에너지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접경지역 지자체간 갈탄, 천연가스 등 공동개발 사업 및 발전소건설사업 등 에너지 협력사업이 추진되었다.³⁴⁾

〈동서독의 도시간 자매결연 교류 내용〉

분 야		내 용
체육문화	교환경기	- 볼링, 축구, 탁구 등의 종목으로 광범위한 주민 참여 유도
	문화행사	- 전시회, 음악회, 영화상영, 작가들의 초청강연 등
	신문교환	- 16개 도시에서 지방신문 상호 교환
전문가회의		- 지방자치 및 지역행정에 관한 의견 및 경험교환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개최 · 도시계획, 노후화된 주택정비, 도로교통계획 - 환경문제, 자영수공업자, 의사, 노동자 및 노조원 의견 교환 등
청소년 상호 방문		- 15~30세 사이의 청소년 상호 방문

자료 : 통일원, 『동서독교류협력 사례집』, 1993, pp. 723~724.

중국-대만의 사회문화교류

1988년 7월 대만 정부가 ‘현 단계 대륙정책안’을 통해 양안간 사회문화교류지침을 마련하면서 중국-대만간 사회문화교류가 활성화되었다. 양안간 사회문화교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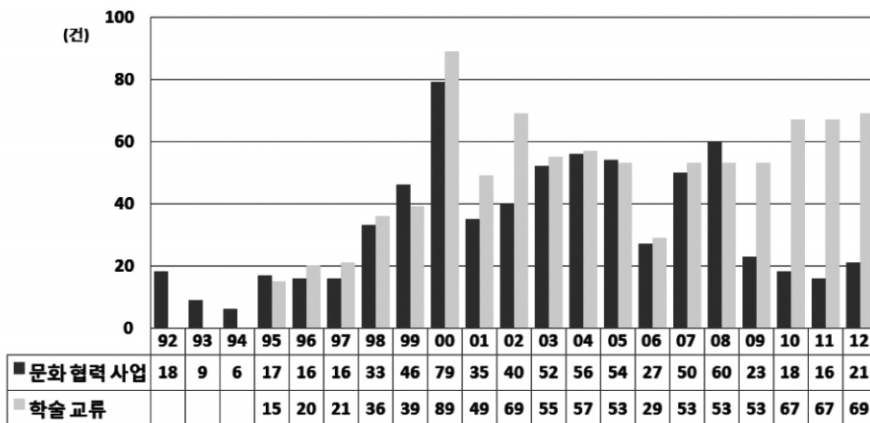
중국-대만은 민간 창구를 통한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1990년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가 설립되고, 1991년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가 설립되어 양안간 민간 대화창구가 개설되고, 1993년 ‘왕고회담(汪辜會談)’³⁵⁾이 개최되면서 양안간 교류가 활성화되었다. 1993년 이후 양안간 교육, 사회과학, 영화, 과학기술, 영상 부문 등 문학과 예술 교류가 점진적으로 증대되었다.

34) 서독 헬름슈테드(Helmstedt)와 동독 하프브케(Harbbe)는 1976년 이후 총 1,500만 톤 규모의 공동갈탄개발과 발전소건설사업에 관한 에너지 협력 사업을 추진. 공해를 유발하는 동독 하프브케의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대신에 서독 헬름슈테드에 새로운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헬름슈테드는 하프브케로부터 갈탄을 수입하는 대신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동독측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협력 추진. 이상준 외, 『통일독일의 지역개발 경험과 북한의 지역개발 과제』, 2000, p. 16.

35) 왕고회담 : 중국과 대만이 양안 접촉 창구로 각각 설립한 해협회와 해기회 간의 회담을 말함. 해협회 회장 왕다오한(王道涵)과 해기회 이사장 고전푸(辜振甫)의 성을 딴 ‘왕고회담’으로 불림.

양안간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대만 정부의 지원은 중단없이 지속되었다. 대만 정부는 문화 협력 사업과 학술 교류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총 692건의 문화 협력 사업을 직접 지원하고,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총 894건의 학술 교류를 공동 지원하였다.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³⁶⁾ 지원 사회문화 교류 추이〉



자료 :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 사이트(<http://www.mac.gov.tw>) 참조.

주 : 문화협력사업은 MAC 지원, 학술 교류는 MAC 공동 지원임.

민감한 사건 발생시에도 양국의 유연한 대응으로 교류를 지속하였다. 1994년 천도호사건³⁷⁾, 1995년과 1996년 1·2차 대만해협 미사일 위기와 2003년 중국의 대만해협 미사일 배치 강화 등 정치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교류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천도호 사건으로 대만당국이 양안간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등 교류 협력이 일시 중단되었으나, 양국의 유연한 대응으로 교류를 회복하였다. 1996년 대만해협 미사일 위기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최고조에 달하선 시기에도 대만 언론사의 제8기 전인대 4차회의 취재가 허용, 대만 기자들은 중국인 민해방군 주요 간부들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였다.³⁸⁾

36)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MAC: Mainland Affairs Council)는 우리의 통일부와 유사한 기관임.

37) 1994년 3월 절강성 천도호에서 중국행 유람선에 탄 24명의 대만 관광객과 중국인 안내원 및 선원 8명 등 32명이 중국 도적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 발생.

38) 또한, 같은 해 대만고등학교 남자배구팀과 여자농구팀이 심양, 북경, 서안 등지에서 친선경기를 개최, 중국인민대학과 북경사범대학도 대만의 교사, 학생, 학부모들로 구성된 64명의 대표단과 교류를 실시함.

중국-대만은 협의의 정례화를 도모하였다.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은 2006년 4월 제1차 양안경제무역문화포럼을 시작으로 연례적으로 포럼을 정례화하고, 협의를 구체적으로 추진하였다. 양안경제무역문화포럼은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 주도로 두 정당 및 양안 기업계, 학계, 상공계 인사 400여명이 참가하는 포럼으로 이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양안경제무역문화포럼 개최 추이〉

분 야	내 용
제1차 (2006. 4, 베이징)	- 양안간 직접통항과 농업교류 촉진 등을 포함한 7개항의 공동건의문을 채택
제2차 (2006. 10, 보아오)	- 양안간 농업 협력 확대 강화 합의
제3차 (2007. 4, 베이징)	- 양안간의 직항 노선 개설과 대륙 주민의 대만 관광 협의 · 양안 직항 전세기 운항 확대, 대만학생의 대륙 대학 진학 적극 지원 등
제4차 (2008. 12, 상하이)	- 양안간 금융 협력 촉진 협의
제5차 (2009. 7, 창사)	- 양안 문화·언론교류, 교육협력 강화, 문화교류협정 체결 등 협의 · 중국어사전 공동 편찬, 양안 영화·TV방송 교류 협력 심화,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협의
제6차 (2010. 7, 광저우)	- 양안간 경제, 무역, 교육, 과학기술, 에너지 등 실질적 협력 강화 합의 · 양안간 대학 등 학위 인증 추진, 공동연구센터 건립 장려, 언론간의 지사 등 상설기구 추진, 양안간 공동 사전 편찬과 학술 등 전문용어를 통일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합의
제7차 (2011. 5, 청두)	- 양안간 원자력 안전 협정 강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적극 추진 합의 · 양안간 문화, 금융, 농업, 투자, 교육 및 청소년 교류를 확대, 강화 합의
제8차 (2012. 7, 하얼빈)	- 양안간 서비스 무역 협정 체결 노력 확대 합의 · 양안간 관광, 문화, 금융, 농업, 투자, 교육·청소년 교류뿐 아니라 출판과 영화 협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 확대 합의
제9차 (2013. 10, 난닝)	- 양안간 경제협력 제도화 및 산업협작 추진 강화를 위한 19가지 공동제안 논의

자료 : 내외신 보도 종합.

교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하였다. 2010년 양안간 지적재산권 관련 협의 체결 및 2013년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등 교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2010년 대만 지혜재산국과 중국 국무원은 「해협양안 지식재산권 보호 협의」를 체결하여 농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 강화, 문화산업에서의 불법 복제 문제, 특허 및 상표권의 상호 승인 등 지식재산 관련 제반 사안들에 관해 합의하였

다. 또한, 2013년 6월 중국 해협회와 대만 해기회는 양안간 서비스무역협정 체결로 전자상거래, 금융, 의료, 통신, 여행, 운수, 문화창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호 시장 개방에 합의하였다.

남북간 사회문화교류협력의 추진 과제

남북 상호 신뢰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정치·이념적 갈등 가능성이 낮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용이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간 사회문화교류협력을 활성화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업이 복원되어야 한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 등 민족 언어를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이 필요하다. 5.24 조치로 교류가 단절되어 각자 작업하고 있는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의 인적 교류를 우선 재개해야 한다. 동서독의 경우에도 ‘그림 독일어 사전’ 편찬 사업을 통독 직전까지 지속하였으며, 19세기 독일어와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연구도 진행하였다. 중국-대만도 중국사전협회와 대만중화문화총회가 중국어 사전 공동 편찬을 추진하여, 중국·대만 학자 200여 명이 15개월만에 2012년 8월 '양안 상용사전' 발간하였다.

둘째, 역사 공동 복원을 위한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왜곡 등 동북아 역사·문화 전쟁에 대응하는 의미에서 일제강점기 공동연구(독도, 동해표기 문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등), 개성 만월대·고구려 고분 남북공동 발굴조사 등 기존 추진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 동서독의 경우에도 독일 중세사부터 현대사까지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등 역사 연구는 양측 학자와 학술 당국의 지대한 관심에 힘입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셋째, 민족 화합 과시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각종 국제대회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 공동 입장 및 공동 응원단 추진 등을 통해 민족 화합을 과시해야 한다. 남북 공동 입장 및 공동 응원단 추진(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 2015년 7월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등),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 동서독의 경우, 1956년 코르티나 동계올림픽부터 1964년 도쿄 하계올림픽까지 단일팀 구성하여 출전한 바 있다.

넷째, 한반도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나무심기사업, 접경 지역 공동방제사업 등 기존 사업 지속 추진 및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위한 범정부적 추진 기구 설립 및 추진 계획 발표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환경 보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동서독의 경우에도 접경지역의 그뤼네스반트³⁹⁾에서 상호교류협력과 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지역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희귀동식물 보전을 위해 정기적인 생태계 조사와 생태종의 복원 및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였다.

다섯째,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제약공장 및 병원 설립, 운영 사업 등 주로 종교계의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정부 차원으로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 동서독의 경우 동독에 위치한 76개의 교회 부속 병원은 서독 교회의 지원으로 우수한 의료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프라이카우프는 서독 교회가 동독에 현금과 현물을 지불하고, 정치범과 이산가족을 서독으로 송환한 방식으로 추진하였는데, 우리도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개선을 추진하면서 동서독간 프라이카우프와 같이 경제·재정적 지원을 통한 협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섯째, 청소년 교류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청소년 관광 및 역사 문화 분야 등을 중심으로 교류 확대를 추진하여 남북간 이질감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 동서독의 경우 청소년의 대동독 여행 등 청소년 교류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였다. 중국-대만의 경우에도 양안간 대학생 교류 및 유학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 교류를 중시하였다.

일곱째, 사회문화협력사업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치군사적 상황에 종속되지 않는 사회문화협력사업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007년 11월 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된 남북간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추진위원회’ 구성하여 ‘남북사회문화협정’ 체결 등 협력 협의의 정례화·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국-대만의 경우와 같이 남북 저작권 교류의 창구도 마련되어야 한다. 統

39) 동서독간 국경선은 총 1,393km로 사람의 통행이 불허된 지역이었으며, 많은 희귀 동식물의 서식처였음.